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91호
2023. 1. 27

- 2023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방향과 소고
- 2023년 건설인력 정책 추진 방향
- SOC, 건전재정 기조 속 2023년 상반기 투자 확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3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방향과 소고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정철학 방향으로 정책 시프트 -

■ 지난해 건설정책 요약과 2023년 1월 달라진 건설제도 현황

-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3高(高물가, 高금리, 高환율) 현상 촉발에 따른 3低(底소비, 低성장, 底생산성) 현상 유발, 나아가 3불안(시장침체, 금융조달차질, 부도 공포) 확산¹⁾이 심화된 한해였으며, 건설정책²⁾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 이 외 지난해를 관통하는 주요 건설정책으로는 ① 연속된 건설생산체계 개편, ② 건설안전제도 강화, ③ 부실·불법업체 관리 강화, ④ 계속된 공정거래 정착, ④ 외국인 건설근로자 활용 확대, ⑤ 물가변동에 따른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 노력, ⑥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강화의 6대 주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즉, 지난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건설정책에까지 완벽히 투영되지 못하고 지난 정부 마지막 해 수립한 관련 정책의 연속된 추진과 일부 새 정부의 정책 반영이 혼재된 한해였던 것과 더불어 건설산업 내·외부 환경변화(3高·3底로 인한 외생변수의 산업 영향력 심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에 따른 긴급한 관련 정책 마련·추진이 혼선되었던 한 해라 볼 수 있음.
- 이와 연관되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달라진 주요 건설정책을 요약해보면, <표 1>과 같이 기존 정책에 연속성을 가진 제도 개선 내용이 대부분임.

<표 1> 최근 개정·시행된 주요 건설제도 현황(2023년 1월 기준)

주무부처	주요 건설제도	변경 사항	시행일
국토부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 민간공사에서도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2023.1.1.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 절차 간소화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 공한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 가능 • 상호시장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시 사무실 점검항목 제외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업무 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2022.9.27. (2023년 限)

1)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2022. 12.), “한국건설 2023년 정책과 전략 주문”, VOICE Vol. 31 참조

2) 본 고에서 분석한 건설정책이란 정부부처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 중 건설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투자, 주택·부동산, 기타 고용, 인력양성, 조세 등의 내용은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산업과 연관된 정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

<표 1> 최근 개정·시행된 주요 건설제도 현황(2023년 1월 기준)-(계속)

주무부처	주요 건설제도	변경 사항	시행일
국토부	중대건설현장 사고 시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	• 중대건설현장 사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처분 (과징금, 건설업등록말소, 영업정지)	2022.7.19.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불공정행위) 도급계약의 불공정한 체결 및 이행, 불법하도급,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등	2022.8.4.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 종합공사인 경우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 * 단, 1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에 게만 하도급 가능	공공공사 2021.1.1. 민간공사 2022.1.1.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 「건설기술 진흥법」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기존 누계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023.1.1.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 5개 항목(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중 하나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 *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가격 변동률의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	2022.7.15.
기재부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기존) 유찰 시 재공고 → (변경) 유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2023.6.30. 限
	한시적 보증금 인하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한시적 50% 인하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7.5%	2023.6.30. 限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 (기존) 검사기한 14일, 대금지급기한 5일 → (변경) 검사기한 7일, 대금지급기한 3일	2023.6.30. 限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 국가계약에 있어 한시적으로 기재부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특례 제도 도입	2022.9.15.
	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 (기존) 계약불이행 시 전체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변경) 계약불이행 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국고 귀속	2022.9.15.
	조달청 중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선	•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 규정 삭제	2023.1.9.
행안부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	•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2023.1.1.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개선	• 입찰 참가신청서·참가승낙서 제출 후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 불참 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삭제	2022.9.20.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중도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현장관리비용 등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2023.1.1.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내역 확인 필요 시에만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2023.1.1.
	한시적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공사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기존의 경우 포함)	2022.12.27.

<표 1> 최근 개정·시행된 주요 건설제도 현황(2023년 1월 기준)-(계속)

주무부처	주요 건설제도	변경 사항	시행일
행안부	계약심사 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삭제하여 발주기관별 원가·설계변경 심사 등 업무역량 강화 및 자율권 확보	2023.4.1.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 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규정 신설	• 종합공사에 대한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등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전체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 제출 시 배점한도(만점) 적용 규정 신설	2023.1.1.
고용부	안전관리자 배치 대상 공사 확대	• (기존) 총 공사비 60억 원 이상 → (변경) 50억 원 이상	2023.7.1.
공정위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 공공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이면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 정보, 유찰 시 유찰 사유 공개 의무화	2023.1.12.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원도급자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분쟁 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	2023.1.12.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중 중소기업중앙회 확대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중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계약 체결 후 납품 물량축소 등 하도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2023.1.12.
	수소 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 경합 시 수소 법원(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 때까지 소송 중지	2022.7.12.
	동의의결제도 도입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 방안과 같은 의결(동의의결)로 사건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동의의결 희망하는 피조사·심의 사업자는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청 * 대상 행위가 검찰총장 고발요건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기존 심의 절차 진행	2022.7.12.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위탁기업의 경우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서면기재 의무 부여 등 * (대상)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2023년 내 시행 예정

자료 : 대한건설협회(2023), "2023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요약 및 재정리.

부처별 올해 주요업무 계획, 국정철학에 발맞춘 건설정책 마련 가속화

- 계묘년(癸卯年)이 시작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잇달아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올해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립한 정책에 따라 예산을 시행하는 첫해로 120대 국정 과제에 발맞춘 개별 부처의 업무계획 마련이 본격화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추진이 가속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정책 분야 또한 동일한 상황임.
-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균형발전, ② 민생 안정, ③ 경제 재도약, ④ 국민 안전의 4대 방향에 따른 5대 정책과제 및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건설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정책과제 내 세부 정책을 <표 2>와 같이 일부 제시함.

<표 2>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과제 ④ :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산업 질서 구축	<div>• 노조 불법행위 근절</div> <div>- 처벌 강화(등록·면허 취소), 신설(금품수수, 공사방해), 집중 점검(부처 합동조사 등),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 대책 마련('23.6.)</div> <div>-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 확대('23.12.)</div> <div>- 피해 신고 활성화 추진(익명 신고센터 설치 → 협회·정부 등 지원*, '23.1.), 영세한 전문 건설업체 피해 시 손해소송 등 법률 지원(협회, '23.6.)</div> <div>*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추진</div>
		<div>• 안정적 인력 수급</div> <div>-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추진('23.下)</div>
		<div>• 분쟁 해소</div> <div>- 건설공사 관련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건설 분야 분쟁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23.下)</div> <div>*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div>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건설·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	<div>• 위기대응력 제고</div> <div>- 공제조합 역할 강화(특별용자, PF보증 등 신규 금융상품 도입 검토) 등 건설금융 안전망 구축</div> <div>- 공사단가에 물가상승분을 적기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23.6.)</div> <div>* 표준시장단가 개정 주기 단축(2년 → 1년), 재료비 등에 적용하는 물가지수 변경 등</div> <div>-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한 건설기계 수급 조절 계획 수립('23.7.)</div>
		<div>• 건설 고부가 가치화</div> <div>- 시공단계에 집중된 PM을 기획·설계단계부터 활용('23.10.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div> <div>- 기술형입찰 확대('22년 13% → '23년 15%) 추진</div>
국토교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div>• 건설 디지털화</div> <div>- BIM(디지털 건설정보모델링) 확대를 위해 턴키 등 대형공사(1천억 원 이상)에 의무화('23.4.) 및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설계 대가 인상</div>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div>목표 : '23년 350억불+@, 임기 내 年500억 달러, 해외건설 4대강국 실현</div>	
	<div>• 원팀 코리아</div> <div>-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집중 공략할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23.6.), 단계별 수주계획 수립·진출('23.7.~)</div> <div>- ICT·원전·방산 등 他 산업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 수출 기획('23.6.)</div>	
	<div>• 지역별 전략</div> <div>- 유망지역별 발주 전망, 수주 특성 등 고려한 전략적 진출</div>	
	<div>구 분</div>	<div>주요국</div>
중 동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div>• 정상 경제외교 확대 및 성과 활용</div> <div>• 신재생 에너지, 원전 등 탈석유 프로젝트 진출 공략</div>

<표 2>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계속)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외건설 4대 강국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구 분	주요국	주요 진출전략
	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 신도시, 스마트시티, 산단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공략 • 무상원조(ODA) 등 원조사업을 건설수주로 연계
	신시장	칠레, 페루, 호주 등	• (중남미) G2G 협력 강화, 중남미권역 MDB 공동참여 추진 등 • (유럽·미국·호주) 현지기업 협력 강화, 패키지 중심 수출 등
	• 고부가 분야 진출 -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자본금 한도를 상향(5천억 원 → 2조 원)하여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PPP) 진출 확대		
	• 기업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23.7.) 및 지원센터('23.3.)를 가동하여 발주·입찰정보 제공, 금융·법률 컨설팅, 애로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해건협, 엔지니어링협, KIND, 코트라, LH 등에 분산된 발주·사업정보 등 통합 제공 - 국토교통 ODA 강화('22. 281억 원 → '23. 307억 원) 등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과제 ⑤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제고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	• 안전 혁신 - '예방-대비-대응-복구' 순단계에 자율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23.10.)	
		• 스마트 관리 -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R&D, ~'27)하고, 지능형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25개소 → 50개소)	
		• 기자재 관리 -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레미콘 공장 인증제 및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전 승인제 도입('23.12.)	
		• 현장 관리 - 형식적 서류작업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토록 현장 서류 간소화('23.4.)하고, 취약현장 점검 대상 확대(150 → 240개소) -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일 작업량 기반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23.10.)	

자료 : 국토교통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기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국토교통부³⁾의 올해 건설정책 관련 주요 업무는 크게 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② 금리인상 등에 따른 산업충격 완화 방안 마련, ③ 계속된 스마트건설 도입 가속화, ④ 해외건설 진출 확대 유도, ⑤ 건설안전 정책 패러다임 변경으로 요약 가능하며, 특히 산업 애로 해소와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① 건설 현장의 안전한 일터 구현과 관련한 계속된 정책 추진과 더불어, ②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방향 모색, ③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함(<표 3> 참조).

3)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건설인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원고 "2023년 건설인력 정책 추진 방향"에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음.

<표 3> 고용노동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노동개혁의 완수	노사 법치주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23.1.~) 및 시정조치 →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법 개정안 발의('23.2.) -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 * 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합동으로 상·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분야 집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 집중 점검(1만 개소) * (3대 사고) 추락·끼임·부딪힘(사망사고의 62.8%) / (8대 요인)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 소규모(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4,820억 원) *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마련 -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정비(1분기~)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 근로자 의무 명확화 등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기업 구인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23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도입,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 -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등 기존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 활용 상 애로 해소 -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자료 :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건설산업과 직접적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23년에는 ①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확산 및 ② 금융부담 완화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표 4> 참조).

<표 4>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단단한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함께도약) 중소기업이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대금 연동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통과에 따른 대상기업(全 산업 기준 12만 개사)의 신속한 제도 확산을 위해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 체결 컨설팅 지원 및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하여 시행 애로 상시 논의 - 시행령·규칙, 지침 등을 적기 마련·시행(~'23.6.)하고,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가이드북 등 안내하여 혼란 최소화

<표 4>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계속)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장 위기극복·규 제 혁파를 위한 정책 원팀 가동	(위기극복) 복합위기 중 건강한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확대, 이차보전 및 요율 인하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신규자금을 코로나19 수준인 25.2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추가 상승 시 기관 운용 여유분 활용 추가공급 검토 * 기보·지신보 신규 보증에 대해 보증료를 0.2%p 인하('23.上) * 매출채권보험 확대(21.2조 원) 및 소기업 보험료 할인(최대 90%), 매출채권팩토링(775억 원) 등을 통해 연쇄부도 방지 • 채무조정·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위기 기업 지원(기업회생 컨설팅 등)과 금융기관 지원(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 * 일시적 유동성 위기(B등급) 또는 구조적 문제 있지만 회생가능(C등급) 기업 대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건설산업 분야에 대해 예년과 같이 두터운 하도급자 보호 정책의 마련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하도급법」 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함(<표 5> 참조).

<표 5>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

핵심과제	세부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중점 감시분야 : 건설 분야 원·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자율적 개선방안 마련 * 14개 공공기관(LH 등)과 협의 → 인사·감사규정 보완, 자체 제보시스템 운영 등 추진 -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하도급법」 개정) 및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시행령 등 개정) * 적용 예외 조항(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 - (자율운영)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 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 3차 협력사까지 확산 추진 •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업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이 유리할 경우,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사건처리 * 지급명령 포함 시 정확한 지급금액 산정에 상당기간 소요 → 향후 금지명령만 부과 -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큰 명절기간에는 '하도급 신속대응반'을 가동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공 건설조달과 관련한 실무적 제도를 주로 담당하는 조달청의 경우 ①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관급자재 수급 차질 방지와 더불어 ② 입·낙찰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장

기 미해결 규제혁신, ③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Pool 확대 및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업무계획을 제시함(<표 6> 참조).

<표 6> 조달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설정책 관련 사항

핵심과제	건설정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책비전 :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급자재 수급차질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미콘, 아스콘 등 관급자재의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납기세분화, 일정 비율 우선 관납 등을 통해 수급 차질 방지
민간·시장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역동성·경쟁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당제재 운영, 신인도 등 근본적 개선 없이 이어온 장기 미해결 과제 중점 규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Top Down → 의견수렴 방식'으로 추진 * (부정당제재 운영) 구체적 적용지침이 없어 과잉 제재했던 불합리한 제재 운영 개선 * (신인도) 조달청 평가의 경우 총 320개(중복제거 96개)에 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존재 → 부처 합동으로 일괄정비, 일몰제 도입, 주기적 평가로 추가 신설 억제 등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 평가 시 공정·투명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풀을 확대('22년 5천 명 → '24년 1만 명)하여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관별 보유 평가위원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관리 - 점수 편차, 업체편향 등 평가위원 불공정 의심 사례 분석을 위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조달행정 신뢰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공사 설계심의 공정·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형 입찰 심의위원 규모를 확대하되, 조달청 참여비율 최소화(10% ↓), 퇴직예정자 배제 등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 간편 신고시스템 구축, 접촉신고 대상 범위 확대, 접촉중단 사유 명확화 등을 통해 퇴직자를 포함한 외부인 접촉관리 강화

자료 : 조달청(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 외에도 해당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나, 공공계약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에 이를 통한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 올해 업무 추진계획… 기존 규제강화 일변도에서 산업 애로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

- 상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 부처의 올해 건설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국정 목표가 부처별 업무에 투영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음. 또한,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건설산업 어려움 가중을 우려한 선제적 정책의 마련이 엿보인다는 점은 환영할 사항임.
- 다만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 산업인 건설산업의 중요성은 배제되고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육성전략에 기초한 구체적 정책 마련은 부재한 채 개별 현안(안전 강화, 하도급자 보호 등) 해결을 위한 단편적 정책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관계 부처별 일원화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함.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2023년 건설인력 정책 추진 방향

-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양적 접근에서 질적 향상으로 정책 전환 필요 -

2023년 건설인력 정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안전 및 품질 제고' 등 강조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이 중 본 고에서는 건설인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함.

<표 1>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의 2023년 건설인력 관련 업무계획

구분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제고 :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22. 390명→'23. 350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혁신)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에 자율적·혁신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23.10.) * (現) 불균등한 책임소재, 인력·서류 중심 대비, 보고서 중심 사고처리, 타율적 규제 (改) 대·중소기업 얼라이언스, 스마트 현장관리, 골든 타임 內 사고수습, 현장 자율형 책임 ○ (스마트 관리) 스마트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R&D, ~'27)하고,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25개소 → 50개소) ○ (기자재 관리) 불량 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레미콘 공장 인증제 및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전 승인제 도입('23.12.) ○ (현장 관리) 형식적 서류작업보다 안전 활동에 집중토록 현장 서류 간소화('23.4.)하고, 취약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150개소 → 240개소)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1일 작업량 기반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고도화('23.10.) □ 건설현장 외국인력 관련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인력 수급)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 추진('23.下) □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관련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불법행위 근절) 처벌 강화(등록면허 취소·신설(금품수수, 공사방해), 집중 점검(부처 합동조사 등),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 근본대책 마련('23.6.) ○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 확대('23.12.) ○ 피해 신고 활성화 추진(익명 신고센터 설치 → 협화정부 등 지원*, '23.1.),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해소송 등 법률 지원(협회, '23.6.) *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 운영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확행*을 통한 자율적 통제 강화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율점검 기간 운영('22.12.29.~'23.1.31.) →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공표방법 보완 등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자율공시 → 2월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 지원 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 및 개편**(~3월) * '22년 사업 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결산 등 철저 →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 결과 불인정 및 환수, 차년도 제재 등 ** MZ세대,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p>□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1.20.~) 및 시정조치(2월~) →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법 개정안 발의(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금지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과제 발굴·논의 * (과제예시) 회계투명성 강화, 노사 현장 불법 근절, 노사 대등성 확보 등, (추진일정) 자문단 출범·운영(1월~) → 전문가안 발표(5월) → 국회제출(8월) ○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 * 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합동으로 상·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 <p>□ (취약분야 집중 지원)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 집중 점검(1만 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사고 : 추락·끼임·부딪힘(사망사고의 62.8%) / 8대 요인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 8대 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인공지능 인체감지 등) 집중 지원(250억 원) <p>□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 명 도입('22년, 8만 명),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 ○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 ○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자료 : 국토교통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에도 '품질 및 안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인력과 관련해 ① 외국인 규제 완화로 인한 현장관리, ②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③ 청년층 유입 및 질적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스마트건설 교육, 건설기술인 법정 직무 교육,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등) 확충 등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법정 기본계획 도래 시점... '산업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교육훈련 강화' 전망

●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2023~2027)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5대 분야별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함(<그림 1> 참조).

- 구체적으로 ①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② 건설 Eng. 산업 경쟁력 제고, ③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④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 ⑤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의 5가지 분야를 제시함.

<그림 1>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과제 총괄(안)

분 야	중점 추진 과제 (15개)
1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스마트건설 실현	① BIM 도입으로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 ② 생산시스템의 자동화/모듈화 ③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2 건설Eng. 산업 경쟁력 제고	④ 기술 중심의 발주제도 개선·운영 ⑤ 업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⑥ 평가 공정성 강화 ⑦ 고부가가치 분야(PM) 육성
3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공사/시설물 안전 확보	⑧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책무 강화 및 이행력 제고 ⑨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부지원 확대 ⑩ 안전·품질 관리체계 강화 및 친환경 건설 유도 ⑪ 시설물 안전·성능 확보 및 신산업 육성
4 청년 등 건설기술인 육성	⑫ 전문인력 양성 및 경력 관리체계 개선 ⑬ 기술인 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5 핵심기술 개발, 데이터 개방 등 건설산업 고도화	⑭ 미래수요에 대응한 R&D 추진 및 상용화 지원 ⑮ 데이터 개방, 공사비산정기준 등 고도화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2),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2023~2027) 공청회 자료.

- 이 중 건설인력과 관련된 추진 과제로 스마트건설 기술 인력 확보, 스마트건설 관련 교육훈련 강화, 건설기술인 직무 교육의 현장성·실용성 제고, 청년층 유입을 위한 산업 이미지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스마트건설, PM(종합사업관리, Program Management)·PPP(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미래시장형 전문가 양성 로드맵 운영 계획을 포함함.
- 한편,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의 경우, 현재 계획수립 중 단계로 건설인력 부문과 관련해서는 건설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교육훈련 강화, 건설인력 수급계획 등의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 변화에 발맞춘 체계적·선제적 건설인력 정책 수단 발굴 필요

- 향후 정부의 건설인력 부문 정책은 규제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양적 접근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정책 레짐(policy regime) 전환이 필요함.

- 또한, 건설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출(예산 편성) 기조와의 일관성도 요구됨.
 - 산업의 급변 시기에 질적 인적자본 축적의 정체, 노동생산성의 하락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능하며, 결국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비용으로 전가(transfer)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황 및 전망’-‘문제 부문 및 우선 순위’-‘거시적·미시적 대책’ 등 ‘건설인력 정책 연계 과정’이 체계적·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본 고에서는 정책 수단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건설인력 정책 연계과정’을 제언하고자 함.
- 건설산업의 건설인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부문별 전망치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함.
- 건설인력 전반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급격차 뿐만 아니라 세부 부문별 중장기 전망치를 제공하는 등 과학적 접근법을 통한 건설인력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설인력의 수급 전망과 이를 준용하는 교육훈련 공급,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이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건설 노동시장에 꾸준한 신호(signal)를 제공하고 있음.
 - 일례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매월 ‘건설 노동자 수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종별·지역별 과부족 인원을 조사하고 있음. 영국도 주요 건설사업별·직종별 중장기 수요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노동시장과 건설인력 정책을 연결하는 첫 단추를 찾아보기 어려움.
- 제도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건설인력 정책의 선순환적 구조(positive feedback)를 마련해야 함.
- 향후 정부의 건설인력 정책은 건설인력 수급계획의 마련, 건설인력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 맞춤형 대책에 따른 재원의 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계의 교육훈련 수요 반영 등을 포괄해야 함.
 - 환언하면, ‘건설인력의 수요는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을 반영했을 때 어떻게 전망되는지’, ‘공급, 수급 격차 및 이에 따른 부문별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맞춤형 대책에 따른 지원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따른 재원확보는 어떤 구조인지’ 등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건설인력 관련 정책 수단들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함.
 - 건설산업은 주거 환경, 인프라 등을 국민에 제공하는 산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건설인력과 건설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적 기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시점임.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최은정(연구위원 · kciel21@cerik.re.kr)

SOC, 건전재정 기조 속 2023년 상반기 투자 확대

- 지역균형발전, 안전 인프라에 투자집중 및 민간투자 유도 지원 -

국토교통부 : 지역균형발전 유도 및 성장 인프라 확충, 교통혁신, 안전

-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업무 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주택경기 대응, 미래 교통수단에 투자에 집중함.

<표 1>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SOC 공급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 100만㎡로 확대,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 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 -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될 수 있도록 용도 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 개편(‘23.上)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 단 10개 이상 조성 - 기존 도심 세제·규제 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 지원 통해 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성장 유도 -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 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 •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추진 - 철도역사선로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23.上), 전국 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착수(‘23.下) • 촘촘한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신규 철도망 지속 확충,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 운행(‘23.下) 등 고속 열차 수혜지역 확대 예정 - 신규 고속도로(아산·천안 등 3개 노선)·국도(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적기 개통, 대도시 방사형 순 환망(상패·청산 등 3개 노선)도 개통하여 접근성 개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추진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완화(‘23.3)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는 폐지(법 개정) 추진 -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 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 구 9억 원)을 폐지하여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23.3.) 및 특별공급(‘23.2.)이 가능해지며, 처분조 건부 청약 당첨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임무도 폐지(‘23.上) 추진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조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23.1.) - 착공 단계 사업장 10조 원 규모의 PF대출 보증 공급 지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5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23.1.~) • 꾸준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지자체와 함께 4.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 1만 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지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추진체계, 이주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올해 2월 발의 예정 -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22.11.~)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23.1.~) 수립 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연계성 높일 계획. 3기 신도시 부지착공 본격 돌입 • 청년·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 호 본격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나눔·선택·일반형) 본격 공급 착수 - 올해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 사전청약 7천 호를 공급 • 우수한 입지, 넓고 품질 좋은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총 10.7만 호(수도권 7.5만 호 이상)를 공급하고,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 • 약자 보호를 더욱 세심하게, 「세입자 및 서민·취약차주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 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 부여 추진 -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23.1., 시범사업) •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 발생 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수사,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 대출(23.1.~)과 임시거처(28개소→100개소)를 지원하고, HUG 보증금 반환심사 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지원 •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을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차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85㎡ 이하)도 매입형 장기(10년) 임대등록 허용,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 - GTX 연장선과 D-E-F 등 추가노선은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하여 임기 내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 추진 • 미래 먹거리 창출, 「완전자율주행(LV4)», 「도심항공교통(UAM)」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율차(27)는 제작·운영기준 및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24.)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 및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23.12.).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고속도로 시범주행 지원 등 최적의 실증 환경도 제공 - 도심항공교통(25)은 UAM법 제정(23.6.) 및 실증비행을 본격 시작(23.8.). 드론·로봇도 공동주택 물류배송을 시작(23.12.)하고,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차세대 물류 서비스 구현 조기 추진 예정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안전체계 전면 재검토(전문컨설팅, ~23.上), 국가사무인 관제·선로 유지보수의 기능도 재정립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재해대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지하 주택 매입 후 용도변경 또는 재건축하여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1.5만 가구(공공 1만 + 민간 0.5만)로 확대 -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23.12.) 등을 통해 방재능력을 제고 - 방음터널 전국 긴급점검을 실시(22.12.30.~)하고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 : 상반기 조기 집행,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민간투자 세제혜택 확대

- 기획재정부의 2023년 주요업무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를 통한 경기 대응과 더불어 수출확대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표 2> 기획재정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SOC 공급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건전재정 기조 속 경기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경기흐름을 감안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22. 63.0% → '23. 65%) 추진 • (지방) 상반기 조기집행(60%), 여유재원 활용 등으로 지방경기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금 활용 저리 융자[지역상생발전기금(6,000억 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1,600억 원), 공자기금(100억 원) 등 총 7,700억 원], 중앙-지방 통합집행관리 등 집행 제고 • (공공기관) '23년 63.3조 원(잠정) 규모 공공기관 투자 추진 및 상반기 집행률(55%) 목표 상향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행 :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 개선 :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는 연장(~'24.5)하고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임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을 30%로 적용 • (공급속도 조절)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 호, 8.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기 신도시의 경우,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 -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문 주택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물량 분산 유도 *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 연장<매입 후 6개월 → 2년>
필수 생필품 등의 가격안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10개소) 구축,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출범(청과) 등 유통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정보제공 확대 • (이자비용)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취득 당시 기준시가 5 → 6억 원)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23년 초 연구용역 발주 후 상반기 중)
수출 5대 강국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23.上) ▶ (해외건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 • (수출인프라 확충) 컨테이너 화물 대다수를 처리하는 부산항에 신규터미널 개장('23.下) 및 배후단지 추가 공급(50만㎡ '23.上)
기업투자 확대 유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로 상향('23년 투자분 한정,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 [개선] 일괄 10%) • (금융)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15조 원, 산·기은) : (금리) 시중 대비 최대 1%p 낮은 특별 우대금리('23년 한시), (대상) 미래성장동력 산업 등 폭넓게 지원, 신성장 4.0 프로젝트 우선지원 -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공급(5조 원, 산·기보)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차감 등 우대,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 우선지원 강화 -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 기여 프로그램 운영 :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11조 원, 산은), ESG경영 성공지원자금(1.5조 원, 기은) 등
건전재정· 공공기관 혁신 등 지속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국유재산) 건전재정 기조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확립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5년간 16조 원 + α)·민간참여 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rain내 국유재산 관리강화, 국유재산 장기대부 민간개발 시범사업('23.下) 통해 민간참여 유도

자료 : 기획재정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해양수산부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위해 메가포트, 해양관광 활성화

- 해양수산부의 2023년 주요업무 방향은 항만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과 재해 안전시설 완비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3> 해양수산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SOC 공급 관련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23.~'29.)하여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고, 환적화물 유치 확대 •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23.~, 타당성 검토) • 인천항 신항,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자동하역·무인수송) 조성(~'26.)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1.4조 원 유치, 복합 산업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지정, 산업단지 전환 등으로 배후단지 공급을 '30년까지 2배 확대('22년 1,569만㎡ → '23년 1,761만㎡ → '30년 3,126만㎡) • 화물 적치 자동화, AI 기반 재고관리 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인천항 : '21~'24년, 400억 원 / 부산항 : '22~'25년, 887억 원)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기업, 유턴 기업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유해시설 외 모든 업종 허용,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유턴 기업 인센티브 제공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26., 목포·부산) 및 IoT 기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 조성(~'26., 새만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23.2., 3개소)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마리나 루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해양레저관광도시) •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6개소 → 10개소)하고, 도서 지역에 바다역(驛) 구축 검토(K-마리나루트)
해양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부산, 통영 등) • 생태·치유·낚시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콘텐츠 다변화 및 저변 확대 - 국가해양정원(서산·태안 가로림만, 포항 호미반도 등),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신안), 해양치유센터(4개소 : 완도, 태안, 울진, 고성), 낚시복합타운 조성 검토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 및 글로벌 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북항 재개발, 크루즈터미널, 거점형마리나, 마리나비즈센터, 지역별 대표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남해안권(부산·여수·제주 등 연계)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 • 크루즈 입항 재개('23.3.) 계기, 인프라 복구(CIQ 장비·인력 및 터미널 시설 정비), 지역관광상품 연계 등 추진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년 빈도 재해(파랑)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전국 항만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월파침수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 방재연덕 조성 등 취약지구 정비 • 재해위험 연안의 토지를 매입,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조성('23., 시범사업 2개소)

자료 : 해양수산부(2023),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교육부 :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마련('23.2월)

-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부), 공공기관 이전(균형위) 등 부내외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학교시설 활용방안 모색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향

- ❖ (재원)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교육청에 재정지원 추가
- ❖ (규제개선) 교육부·행안부 투자심사 간소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사항 발굴
- ❖ (추진체계) 교육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협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역별 자산을 활용한 문화특화클러스터 육성, 국립박물관 지역 이전(세종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노후 산단 등 유희시설 활용 문화인프라 조성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부산광주대전 기 완료, 경남 '23년) 및 지역거점별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23년~, 개소당 1천~5천 석)
- (K-관광 휴양벨트 조성) 광주-전남-부·울·경 연계 남도문화예술-한국형 웰니스관광-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조성(3조 원 규모, '23년~'33년)
 - 범부처 협업으로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5개 섬, 각 10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 인프라 확충

-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 태양광 편중 완화를 위한 풍력 보급 확대(태양광:풍력 '30년 6:4)
 - ※ 풍력 설비 전망(누적) : ('21년) 1.7GW → ('22년) 1.8GW → ('23년) 2.2GW
- 에너지 인프라 확충('23년 20조 원 투자)
 - 원전, LNG,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 설비 지속 확충
 -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원, 송전망 투자 확대 등 전력계통 확충을 위한 종합패키지 마련('23.1Q)
 - 대규모 민간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밀착지원
 - ※ 인천·울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4천억 원, 수소충전소 투자 프로젝트 947억 원, 수상태양광 발전소 1,600억 원, 해상풍력 5개 프로젝트 약 3,700억 원 등

환경부 :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투자

- 국립공원 이용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 (시설) 무장애 탐방 인프라(5개), 노후 야영장화장실 개량(72개)
- 생태관광 활성화(생태관광지역 '22년 29개소 → '23년 32개소, 탐방시설 설치 등)
- (생태공간) 도시 내 단절·훼손된 유휴지(폐철길, 폐공장 부지)를 복원하여 서식지 연결 및 국민 생활 속 생태공간 제공('23년 6개소 추가)
- (인프라) 극한 강우 대응 인프라 구축('23년~'27년)
 - (도심) 대심도 빗물 터널(광화문, 강남역), 하수관 키우기 등
 - (하천) 지하 방수로(도림천), 소규모 댐(포항항사댐), 강변 저류지(안양목감천) 제방 보강 등 국가하천 대폭 정비('22년, 4,100억 원 → '23년, 4,510억 원)
- (대체 수자원)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 신규수자원 확보
 - (하수 재이용) 하수를 정수하여 산업·생활 용수 연간 8억 톤 공급(산업용수 1.4억 톤, 생활용수 6.6억 톤)('23년~)
 - 연간 1.7억 톤 규모의 공급시설 신규 구축('23년~'30년, 기흥·화성·평택)
 - (지하 저류댐) 식수난이 잦은 섬에 우선 설치('23년 통영 욕지도, 웅진 덕적도), 향후 전국의 다른 섬으로 확대('23.12, 종합계획 수립)
 - (해수 담수화) 서산(대산 임해) 담수화시설 구축(~'24년), 연간 0.3억 톤 공급
- (지반침하) 결함 있는 노후 하수관 지속 개량

■ 정부 SOC 투자 관련 주요 부처 경기 대응… 국가균형발전, 안전, 민간투자 유도에 초점

- 정부 SOC 투자 관련 주요 부처들의 업무 방향은 국가균형발전 및 안전, 민간투자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운데 상반기 재정투자 집중을 통한 경기대응력을 강화함.
 -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성장인프라, 안전 투자에 초점을 맞춤.
 - 기획재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집행 확대를 통해 경기대응력 강화와 수출지원 및 민간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함.
 - 그 외의 부처들은 부처 특성에 맞는 인프라(학교시설, 항만, 에너지시설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안전을 강조함.
- 건설기업은 이러한 정부 SOC 투자 방향을 고려한 시기별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함. 상반기에는 공공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또는 안전시설물사업), 하반기에는 민간의 시설 투자에서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맞춤형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임.

염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